

윤석헌의 금융개혁 마이웨이, 독선인가? 철학인가?

# 1 법원 판결난 키코 재조사... 암보험 등 일괄구제

## 2 '기울어진 운동장'... 내부거래 등 엄중 제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에 있어서는 금융사와 '전쟁' 방침을 밝히며, 관련 대표 민원인 키코(KIKO)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내놓으며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과 분쟁이 많았던 암보험,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소비자 편에 서기로 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고,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는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약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

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 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 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3 삼바 조치안 원안고수... "증선위 수정요구는 참고만"

"이슈 자체 흔들릴 가능성 원안에 집중해 심의 부탁" 증선위 수정 요구에 선 그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 견해가 있었을테니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문제가 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제출한) 당초 조치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며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증선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증선위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이슈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는 감사정보 등에 대한 공개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

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 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사 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정보공개 확대 방침은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4 분식회계 적발 계좌추적권 도입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해야"

금감원, 대기업 회계 밀착 감시 공매도제 악용 행위 기획조사도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회계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곧바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외국인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해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 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50억원 이상 고의 회계 분식은 회사 규

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조치하고 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자료요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각각 필요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 적용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 판매 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기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영계 6단계 기자회견

영업익 고려, 합리적 수준서 결정

경영계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익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

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단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